

이젠 리스크 관리할 때… 청문회·부동산 안정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초고속 일처리에 여론 ‘호의적’
인사청문회서 출혈 최소화해야
부동산→주식 시장 흐름 유도
사법개혁, 속도 대신 내용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버리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버리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

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겹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

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조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포함 상법개정안 처리

與野 함께 처리한 ‘1호 협치 법안’
대주주·우호지분권 영향력 감소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수주주 보호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가운데,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의결권 3%제한(3%룰)을 적용하기로 하고, 보완사항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총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오전 회의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양당 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만나 가깝스로 합의했다. 속개된 오후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양당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 오전에 세 가지 쟁점없는 합의 사항을 포함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데 3%룰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사외이

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같은 경우, 선출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계산해서 3%룰을 계산하는데, 감사나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을 한다”며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땐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강화돼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엔 그것보다 완화돼 있는데,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룰’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3%룰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고,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서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1호 협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安 “코마 상태 野, 살려낼 것”

송 “당 변화 추진할 혁신안 마련
安,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생각”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 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